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선회의'(연선회의)가 21대 총선 출마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대학 내 성폭력 대책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전달했다.

대학내 여전한 'N번방' 입법통해 구조 개선을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 발표
31개 대학생 단체 '공동입법요구안'
"평의원회, 구성원인 학생 참가못해"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대학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등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차기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다. 대학생들은 학생 인권과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해 대학 내 담당 기구설치와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한 요구안과 질의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N번방' 사건이 사회 화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같은 학생들의 움직임이 대학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대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와 '서울대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 학생회장 연선회의'(연선회의)는 지난 23일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21대 총선 출마 정당 3과 후보자들에게 전하는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대학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발표했다.

미투 운동 흐름 속에서도 서울대를 포함한 대학가에서 수많은 성폭력 사건이 생겼지만 교원 징계위원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대학의 비민주적 의사결정, 권력형 성폭력, 침해되는 교육권 문제에 대한 원인은 대학 구조와 고등교육 정책"이라며 "학생이 구성원의 대다수를 차지함에도 평의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이 일어나도 교원징계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대 평의원회 학생참여 ▲교원징계위원회 제도개선 ▲국가 책임 고등교육 재정지원 등이 담긴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했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과 서울대 총학생회 등 31개 대학생 단체도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 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요구안' 발의를 촉구했다.

학생들은 교원이 학생에게 저지르는 권력형 성범죄를 가중 처벌하고, 교육부가 정기적으로 대학 인권 실태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라고 요구했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내달부터 만55세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 A부부(남편 57세, 아내 55세)는 지난해 아내의 조기퇴직으로 월 소득금액이 4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자녀 대학 등록금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아 난감한 상황이다. 올해 초 보유하고 있던 시가 9억원 주택을 이용해 주택 연금에 가입하려고 했지만 만 60세가 되지 않아 가입할 수도 없는 상황. 공적연금을 받기까지도 아직 몇 년이 남아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에서 만 55세로 낮아진다. A부부처럼 은퇴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만 65세)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보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달 일

정액의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낮아진다. 대상은 부부 중 한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주택이 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가능하다. 다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똑같이 시가 6억원인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만 60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월 125만원, 만 55세에 가입하면 월 92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사망 등으로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수령한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이 종료시점 주택매각가격이 적은 경우 주택매각 잔여금액은 법정 상속인에게 반환된다. 주택연금 기입 기간 중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과제물 대체, 학습플랫폼 혼란 등 문제 많은 비대면 수업

대학생 80% "온라인 강의 불편"

설문 응답자 대다수 온라인 강의 집중력 저하, 서버 불안정 등 단점 실습수업은 온라인 불가능 한계

Q. '코로나19' 여파,
온라인 강의 어떻습니까?



"불편함 겪었다"

대학생들의 온라인 강의에 대한 의견
/인크루트·알바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개강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의를 하지 않고 과제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24일 인크루트와 알바몬이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19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대다수(전면 실시 65.2%, 부분 실시 31.3%)는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약 8명(78.9%)은 온라인 강의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교수님 목소리 전달이 잘 안됨'(12.7%), '영상이 저화질이라 강의 내용, 판서 확인 어려움'(10.4%) 등 영상

과 음향 기술 관련 문제를 시작으로 '강의마다(녹화or실시간) 수업방식, 수업플랫폼이 여러 곳이라 혼란'(20.2%), '출결관리가 어려움'(15.7%), '서버 다운 빈번, 접속 원활치 않음'(14.2%) 등 불편을 초래한 이유

는 다양했다.

특히 앞선 이유보다 가장 많이 꼽힌 불편함 1위는 '과제물 대체가 많아졌다'는 것(24.2%)으로 나타났다. 일반 대학의 온라인 강의가 전면 시행되는 게 전례가 없었고, 학교 측도 강의 제작과 준비에 일정이 넉넉했을 리 없다. 개강과 동시에 '과제 대체'와 '리포트 대체' 문구를 확인한 대학생들의 허탈감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대학생들은 온라인 강의 단점으로 '집중력 저하'(19.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접속, 서버 장애·불안정'(16.6%), '온라인 강의 질 저하'(16.2%), '수업 중 문답, 질의 처리가 어려움'(13.4%), '팀 프로젝트 불가'(6.8%) 등 기존 대면 수업과 비교해 아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 '실습수업은 온라인 강의 불가능'(14.2%) 등 불편을 초래한 이유

/한용수 기자 hys@

비례연합 더불어시민당, 與후보 '11번 이후' 배치

후보 1번 코로나 대응 TF 활동
타정당 비례대표 후보 순번도 부여



더불어민주당 4·15 총선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1번~8번

/연합뉴스

더불어시민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한 타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순번도 부여했다. 후보 5번은 용해인 전 기본소득 당 대표, 6번은 조경훈 전 시대전환 공동대표다. 이들은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소수정당 목으로 정해진 것이다.

시민사회 출신 비례대표 후보도 순번이 정해졌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위안부·강제징용' 목으로 비례대표 7번을 부여받았다. 비례대표

8번에는 '언론 개혁' 목으로 정필모 전 KBS 부사장이 선정됐다. 양이원영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환경 분야' 목으로 비례대표 9번에 배치됐다. 유정주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장은 '문화 예술' 목으로 비례대표 10번에 배치됐다.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는 11번부터 순번이 부여됐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軍, 내달까지 간부포함 장병 '이동통제'

다음달 5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부대 회식과 사적 모임, 출장, 골프가 금지된다. 국방부는 24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4월 5일 까지 약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나선 것과 관련해 전군에 부대 관리 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군 장병들의 휴가 및 외박, 외출·면회도 같은 기간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동원예비군 훈련도 6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러한 통제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더 연장될 것으로 보여진다.

군내 예방적 격리 대상자에는 전체 해외 여행자와 특별재난지역을 방문한 경우도 포함했다. 입영 직전 해외 여행

경험이 있는 신병은 예방적 차원에서 일정기간 격리해야 한다.

일과 이후 간부들은 영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대 내 숙소에서, 영외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에서 각각 대기해야 하고, 외출이 불가피 할 경우 지휘관 승인을 받아야 나갈 수 있다. 간부들의 외출 통제는 사실상 장병 출타통제 때부터 대다수의 부대가 실시해 왔다.

전역자 등 외부인원들의 출입이 허용됐던 군 골프장(체력단련장)도 이 기간 동안 문을 닫는다. 영내·외 종교 행사는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이나 종파별 자체 제작한 영상을 시청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타 부대 망문 및 타지역으로의 출장도 원칙적으로 금지돼,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상관에 대한 대면보고도 비대면보고를 권하고 있다. 비대면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군내 예방적 격리자 관리 강화 지침도 내려졌다. 지침에 따르면 지휘관 명의의 '격리지시서'를 발급하고, 이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장병에게는 강화된 처벌을 내리게 된다.

/문형철 기자 captinm@

